

‘코로나 위기’, 간소한 행정·유연한 사회시스템이 답

교수칼럼

김 태 훈
경제학과 교수



4월 초부터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8월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빠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기가 어렵게 되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정부의 정책들은 불가피하게 경제의 수요와 공급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염병으로 인한 사업체의 폐업, 근로능력의 저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시행되었던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 글로벌 공급망 축소 등은 우리 경제의 생산능력 저하를 야기한다. 반면에 전염병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소비와 외부활동이 감소하거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감소하고, 해외시장에서 수출이 감소하면 기업들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위축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수요를 진작시키거나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시도할 수 있지만, 전염병의 확산 시기에는 지난 8월 소비 진작을 위해 시도했던 숙박 및 여행 쿠폰 지급의 취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감염확산의 위험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 사람들의 생산 및 소비활동 위축도 근본적으로 전염병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태로 이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당면과제일 것이다.

OECD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양호하다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실업률, 고용률, 실업급여 신청자 수 등 고용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모두 악화되었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장, 종사상의 지위별로는 임시 및 일용직에서 실직



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와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사진=unsplash)

“
코로나19는 사회에
불가피한 수요와 공급의
축소를 불러왔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인구 감소로 연계되지
않기 위해 현재를 직시하고
대처해야 한다

”

이 많이 발생하여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었던 근로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다. 현재 정부는 단축근로나 임시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확대 지급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대처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은 기업의 신규채용 규모 감소다. 최근의 국내외 연구들은 코로나 위기 이후 기업들의 신규채용이 크게 감소했음을 데이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특히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로 인한 청년층의 고용문제 심각성은 이것이 단기적인 취업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들의 장기적인 고용조건 악화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기존의 경제학 연구들은 경기불황 시기에 졸업한 학생들이 노동시장 진입 당시에 고용조건이 열악할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고용조건이 회복되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의 지식 및 기술의 습득과 인턴 등의 취업준비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충분히 획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은 단기적인 것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청년들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현재 청년층의 고용문제는

노동수요 측면에서 기업의 채용축소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공급 측면의 구직활동지원이 청년층 고용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또한 현재의 고용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전염병 감염의 우려로 인한 사람들의 소비위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도 고용을 충분히 회복시키는 방책이 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보다 장기적인 견지에서 우리가 되는 것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인구문제가 보다 심화되는 것이다. 통계청에서는 장래인구추계라는 이름의 미래 인구 전망치를 5년마다 공표하는데, 이는 장기재정전망, 복지재정전망, 인력수급전망, 교육 및 국방정책 등 정부의 중장기 정책수립에 중요하게 활용된다. 2016년에 추계가 공표된 이후 원래는 2021년에 새로운 추계가 공표될 예정이었으나, 출생아 수가 2016년에 전망한 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실현되어 2019년에 특별추계를 공표했다. 문제는 2019년과 2020년의 출생아 수가 새로운 특별추계에서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한 출생아 수보다 낮게 실현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혼인건수가 급감하여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대로 혹은 그것보다 좋지 않게 인구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내 출생이 전체 출생의 약 98%에 달하기 때문에 혼인건수의 감소는 가까운 미래의 출생아

수의 감소를 의미한다. 물론 코로나 이후 혼인건수의 급격한 감소가 일시적인 것이고 위기종식 후 곧 반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실현되는 수치들을 보면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혼인과 혼인가구 내의 출산이 모두 감소할 수 있고 이는 다소 고통스러운 정부의 중장기 정책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소 우울한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는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조치들을 철저히 시행 및 준수하고 기업들의 도산과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이 나타나지 않도록 위기 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연구들은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지급시기의 지연 등이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지원대상과 규모가 합리적으로 정해지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집단에 대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계에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의 영향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객관적인 연구들이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수립의 바탕이 되고,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